

바이든 “모든 성인 백신 5월까지 확보”

기존 계획보다 두달 앞당겨

J&J 승인 등 3개의 백신 활용

“내년 이맘때 정상화 희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5월 말까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제 모든 미국 성인에게 충분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날짜는 앞서 그가 7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힌 것보다 두 달 앞당겨진 것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우리는 7월 말까지 6억 도스의 백신을 확보할 텐데, 이는 모든 미국인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접종 속도가 빨라진 것은 기존의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텍 백신 물량 공급이 이번 주부터 확대되는 데다가 존슨앤드존슨(J&J) 백신이 이틀 전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되면서 미국이 3개의 백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공급을 주당 1450만 도스에서 1520만 도스로 늘린다고 밝혔다. J&J 백신 280만 도스도 배포될 계획이어서 이번 주 배포되는 주당 백신 수는 1800만 도스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공약인 취임 100일 이내 1억 도스 접종 목표 도달을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온라인 접종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백신 배포와 접종, 물류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실제 접종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확보에 가속이 붙는 상황

을 “중요한 진보”라면서 “백신 공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 팔에 주사를 맞힐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물량 증가에 맞춰 신속히 접종할 의료진 증원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년 이맘때쯤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끝내더라도 곧바로 대유행 이전의 삶으로 곧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바이든은 미국 제약사 머크(Merck)가 경쟁사인 J&J 백신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J&J가 공급 확대를 위해 주 7일 24시간 시설을 가동하도록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보여줬던 기업 간 협력 형태라고 불렀다.

특히 그는 미국이 확보한 3개의 백신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열 기회를 가졌다면 모든 교육자, 학교와 보육원 직원들이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1회분의 백신을 맞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30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주가 그렇게 하도록 연방정부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방정부가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접종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협을 가법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다. 생명이 위태롭다”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더힐은 “이 언급은 텍사스, 미시시피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화 등 규제를 풀고 사업체가 완전히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쿠오모 주지사 물러나리”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앤드루 쿠오모(63) 뉴욕 주지사의 집무실 앞에서 시민들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전 보좌관과 전 비서 등에 의해 성희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쿠오모 주지사는 공식 석상에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속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일(현지시간) 벌어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현장에 경찰이 발사한 최루 가스가 자욱하다. 미얀마 군경은 이날 또다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웅산 수치측, 군부에 반격...장관 독자 임명

‘합법성 없다’ 메시지 국제사회 발신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측이 특사에 이어 각료를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등 군사 정권에 반기를 드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군경의 무차별적인 유혈 진압에 대한 전세계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정권이 합법성·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지원을 호소하는 전략이다.

군정이 무효를 선언한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당선된 수치 고문측 의원들의 모임인 CRPH(연방의회 대표 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쿠데타로 인해 문민정부 내각이 활동을 못 하게 된 만큼, 장관 대행 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문민정부 27기 장관들을 즉각 해임하고 군정 장관들을 임명한 데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CRPH는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소속으로 작년 총선에서 당선된 인사 3명을 외교부 등 6개 부처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또 코로나19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 와이 소 양곤 제1의대 총장이 3개 부처 장관 대행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조 와이 소 총장이 쿠데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군정 아래에서 공직을 맡기를 거부했으며, 현재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 중인 인사라고 전했다.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 소통을 위해 틈인 아웅이 거주하는 미국 메릴랜드주(세)에 국제관계 사무소도 개설하고, 국제사회에 군정이 아닌 CRPH와 공식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 즉각 종식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한 연설로 외교부에 파문을 던진 조 모 톤 주유엔 미얀마 대사도 CRPH 편에 설 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조 모 톤 대사가 연설을 마치며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널리 퍼진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모습은 전 세계에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코로나 베이비붐? ...미국 출산율 오히려 떨어졌다

28개주 지난해 12월 출생아수

전년 동기 대비 7.2%나 줄어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 출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28개 주들에서 팬데믹이 선포된 뒤 9개월째인 지난해 12월 태어난 아이 수가 재작년 동기보다 7.2% 감소했다고 CBS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출생아 수는 3만2910명으로 재작년 동기의 3만6651명보다 10.2% 감소했다.

하와이주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30.4% 줄어들었다. 매년 출산통계를 발표하는 31개 주 중 30개 주에서는 출생아 수가 재작년보다 총 9만5000명 정도 감소했다. 유일한 예외였던 뉴햄프셔주에서도 출생아 수는 4명 늘어났을 뿐이다.

미국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인 필 코언은 “지난해 12월 출산율은 베이비 붐이 끝난 1964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것이 팬데믹의 충격인지, 아니면 (출생아 수가) 더 심하게 감소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불확실성, 불안정성으로 인해 2021년 출생아가 30만~5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후 브루킹스연구소는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졌다”면서 출생아 감소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학교와 보육시설 폐쇄 등으로 출생아가 약 3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낙태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인 구트마커 연구소의 로라 린드버그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유례없는 수준”이라면서 “경제 대공황이 닥친 1930년대에도 출생아 수는 약 3%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 도시계획·인구학 교수인 도널드 마이어스는 “출산율 감소는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면서 “주거비, 교육비 등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억만장자 수 1000명 넘는 첫 나라는 중국

후룬리포트 글로벌 부호 명단

미국 제쳐...마윈은 순위 추락

중국 미국을 앞질러 최초로 억만장자가 1000명이 넘는 나라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서 밀려났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후룬리포트가 1월 15일 평가 기준으로 집계한 2021 글로벌 부호 명단에서 중국은 억만장자가 1058명으로 미국(696명)을 따돌렸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610명 가운데 중국이 318명이며 미국은 95명이었다. 후룬리포트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양적

안화 속의 증시 붐과 기업공개(IPO) 물결로 매주 8명의 억만장자가 새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생수업체 농푸산취안 창업자인 중산산은 농푸산취안의 IPO로 일약 단박성에 오르며 부호 명단에 진입했다. 그는 850억 달러(약 95조 원)의 개인 재산으로 세계 7위에 올랐다. 텐센트 창업자이자 CEO인 마화팅은 재산이 70% 증가한 740억 달러 중국 부호 2위에 올랐다.

중국 최고의 부자였던 마윈은 올해 순위가 4위로 떨어졌다. 세계 순위에서는 4계단 하락한 25위다. 마윈의 재산은 550억 달러로 22% 증가했다. 틱톡을 보유한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은 중국 부호 5위에 처음 진입했다.

세계 최고 부자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로 그의 재산은 1970억 달러에 이른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